

서평

---

## 한반도 국제정치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 잡기

: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일정책 재고(再考)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

(김태균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

(김범수 엮음, 박문사, 2021)

이정환 (서울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모색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미래 국제구조의 성격이 불투명하다는 의미이다. 미중관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이 미중경쟁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외교전략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중경쟁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미중경쟁과 직결되지 않는 기존 외교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오히려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외교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미중경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과제와 일본과의 역사인식 현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 과제는 미중경쟁 속에서 그 성격 자체가 변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두 과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모색은 미중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과제에 대한 한국 나름의 해법 도출은 미중경쟁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외교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중경쟁에 대한 대응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과 2월에 각각 출판된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와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 두 책은 2021년 시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의 정책대응 고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두 책은 각각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일정책을 다루고 있고,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는 한국의 오래되고 중요한 외교과제로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 두 책이 가지는 수많은 기존 연구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두 책 모두 글로벌적 관점 또는 보편성에 입각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책이 기존 연구들과 가지는 차별성이 이 두 책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점에서, 이 두 책의 연구사적 의의는 일맥상통한다.

물론 한국의 특수한 외교과제인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를 보편성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학』의 출판 기관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관계를 보다 보편성 관점에서 찾아보려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평화다원주의, 공존, 증오치유와 같은 평화인문학 관점 속에서 수행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기존 연구는 『한반도 평화학』의 보편성 강조

관점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학』은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반도 특수론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한반도 평화학』은 보편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남북연구와 통일연구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 균형 잡기는 『한반도 평화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존 한일관계 연구에서 특히 역사갈등과 화해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유럽과의 비교 사례 방법과 구성주의적 이론틀을 동원한 서구 연구자들(대표적으로 Thomas Berger, Jeniffer Lind 등)은 한일관계에 대한 보편적 일반론 재정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한일 역사인식 현안의 특수한 복잡성과 그 현안이 국내 정치와 한일 외교의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한일관계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에서 추구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 잡기는 보편적 관점에 대한 강조에만 있지 않다. 이 책의 저자들은 꽤 많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담아내면서, 보편적 관점이 빛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구체성이 담긴 분석이 함께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sup>1)</sup>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9년 공동연구의 결과이자 동 기관의 평화학총서 시리즈 첫 번째 도서로 2021년 3월에 발간된 『한반도 평화학』

1)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의 이러한 연구사적 의의는 2020년 12월 출판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동연구 결과물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양기호·기미야 다다시,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 - 정치 편』(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정재정·도노무라 마사루,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 - 역사 편』(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0).

은 그 부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에서부터 남북한 양자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 ‘평화’라는 보편성의 맥락에서 남북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시너지를 통하여 교차·구성되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통섭적 접근의 집합체’가 되는 ‘한반도 평화학을 제시하겠다는 선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8개 장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학』은 1장 서론과 8장 결론을 제외한 6개의 장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다. 1부에서는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질서의 거시적 분석수준에서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한반도 남북관계의 분석수준에서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고 있다.

1부 〈세계질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전재성이 담당한 2장 〈탈냉전기 미국 주도 세계질서와 평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다루지 않고, 한반도가 처한 국제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전재성은 냉전 이후 미국 단극패권 시대의 평화 도래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는 과정으로 지난 30여 년간의 국제구조 변동을 분석하였다. 그는 탈냉전기 평화에 대한 기대가 달성되지 못한 배경에는 제국주의와 탈식민의 19세기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미국의 탈냉전기 세계전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재성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최근 저작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sup>2)</sup> 2장은 미중경쟁 시대 미국의 상대적 국가역량 축소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서 세계정치 변동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조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2) 전재성,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전재성,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서울: 한울아카데미, 2020).

서, 미국의 미래 세계전략에 앞으로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김성철이 집필한 3장 <북핵 논의의 비판적 재고>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황지환이 집필한 4장 <남북한 군사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넥서스: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를 넘어서>는 각각 북한의 핵 문제와 남북 군사협력을 다루고 있다. 3장에서 김성철은 북핵 문제를 보편적 핵 연구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성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핵 비확산, 핵 통제·폐기, 핵 억제라는 핵 문제에 대한 핵 연구의 세 가지 일반론적 분석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다시 분석하면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는 핵 비확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의 NPT 체제 복원의 문제로 분석하고, 핵 능력의 제거를 의미하는 핵 통제·폐기 차원에서 남아공 비핵화 경험과 비교하여 리스트의 '신고', '폐기', '검증' 과정에서의 신뢰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핵 억제 차원에서 북한의 핵 억제 '의지'의 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다. 3장은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한 이해를 핵 문제의 보편적 관점 속에서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4장에서 황지환은 2018년 판문점 및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에 합의된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가지는 큰 의미에도 불구하고 향후 군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국제정치이론과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다. 과거 남북한의 사회문화 분야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군사분야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2018년 이후 군사분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역기능주의적 접근법도 북미관계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 않는 한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4장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협력이 어떤 분야에 초점을 두어 시도되더라도,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북미관계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 준다.

2부 <남북협력, 통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도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협력 및 한국 내부의 통일준비과정을 보다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연구원의 최규빈이 집필한 5장 <긍정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은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을 ‘경제적 국가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의 개념틀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진작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경협 정책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의 슬로건 모두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한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대북관여 정책들이다. 저자는 남북경협을 통한 긍정적 관여가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경제국가통치술의 이론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5장은 4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성을 지닌다.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양자간의 협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4장과 5장은 다소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4장이 보여주는 현실과 5장이 제시하는 이상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모두 남북관계에서 발견되는 복합적 성격의 부분일 것이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류덕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조용신, 산동대학교 경제연구원의 주영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홍석철이 공동 집필한 6장 <통일비용 재정의와 비용추계 혁신 방안>은 기존 통일비용 연구의 한계점을 논파하는 성과이다. 기존의 통일비용 추계 연구가 통일 유형, 통일 시기, 통일비용의 유형, 추계 방법 등에서 일관성 있는 분석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비용 추산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통일 유형, 통일 시기, 통일비용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이에 입각한 구체적인 통일비용 추계 방법

론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통일이라는 하나의 유형이 아닌, 경협, 통합, 통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비용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6장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통일비용의 구체적 추산 필요성에 대한 지적 요구에 답을 주고 있다. 6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 정의, 분석 범위, 방법론에 있어서의 일신은 향후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 추산 연구가 후속 작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내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논의를 보다 풍성하고 엄밀하게 만드는 데 공헌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호가 집필한 7장 〈평화로 함께 가는 여정: 통일 공론화에 대한 소고〉는 한국 내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합의 기반이 부재하고 대북정책이 국내 정치 갈등 구조의 중심축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대북정책과 통일에 대한 국내 합의 구축의 방법으로 김석호는 범국민적 차원의 치열한 논쟁과 다양한 집단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공론화 프로세스에 정통한 저자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갈등 조정의 난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북정책의 국내적 공감대 수립의 과정이 가지는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자가 결론에서 강조하는 공론화 프로세스에서 세 가지 주의 사항(참여의 불평등 해소, 참여의 의례화 주의, 극단적 주장 대두의 주의)은 대북정책에만 해당하는 점은 아니지만, 대북정책의 국내 거버넌스 구축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학』의 대표 저자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태균이 집필한 8장 〈한반도 전략적 평화를 위한 시론: 평화조건과 양자승인의 이중주〉는 결론인 동시에 분쟁 이후 평화구축의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증 연구이기도 하다. 김태균은 UN PKO 활동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UN이 평화협정에 부과하는 평화조건과

관련 핵심국들의 양자적 승인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평화구축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분석하고, 한반도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공식적인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승인절차가 평화협정의 정치적 작업에 뒤따라야만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평화가 단단한 토대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최소한 미국, 중국이 이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8장은 한반도 평화협력 구축이 남북한 즉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며 보편 타당한 규범과 원칙, 그리고 주변국들의 이익이 부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반도 평화 도출의 현실성이 높아진다는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학』은 하나의 주장 속에서 모든 장이 수렴되지 않고, 각 장이 개별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주장의 수렴이 아니라 분석대상을 관찰하는 시점에서 명확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책의 본질적 취지이다. 모든 장은 한반도 문제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보편적 성격을 보다 강조해서 살펴보겠다는 공통의 토대에서 서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장이 보여주는 남북관계의 보편적 성격에 대한 함의는 남북관계 연구와 통일 연구가 왜 '평화학'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김범수가 편집해 출간한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는 2018년 이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연구이다. 한국의 일본 연구, 한일관계 연구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본 도서는 2021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분석의 구체성과 함의 제공에서 탁월하다. 더불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가 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한중일 교류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육에서 관련 이슈들

에 대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이 대중을 향한 도서출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연구-봉사라는 대학의 세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매우 긍정적 사례일 것이다.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는 편집자 김범수가 집필한 1장 〈서론: 갈등을 넘어 화해로〉를 제외한 총 8개의 장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일 과거사 문제의 성격을 다루는 1부, 한일 양국 간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의 갈등에 대한 2부, 한일 화해를 위한 비교 연구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된 3부의 구성은 현재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다각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에 매우 적실성이 크다.

1부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의 2장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의 진화: 역사 문제와 안보의 연동 메커니즘〉과 3장 〈한일관계의 기저를 다시 생각하다: ‘안정적이고 지속적 관계’를 위한 전제들〉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이 집필한 2장은 외교사적 기반 속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김상준이 집필한 3장은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2장에서 남기정은 최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한일 역사 갈등의 기원을 한일회담의 과정 속에서 찾고 있다. 1951년 도쿄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회의실에서 예비회담으로 시작하여 1965년까지 15년 동안 진행된 한일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은 대립되어 드러났다. 1951년 10월 22일 예비회담 제2차 회의에서 양유찬 한국 수석대표와 치바 히로시 일본 교체 수석대표 사이의 “풀어야 할 응어리(hatchet should be buried)”에 대한 논쟁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화해에 대한 본질적 논의에 양국이 이르지 못하고, 냉전 구

도 속에서 1960년대 도달한 한일회담의 결과는 한일병합 무효의 시기에 대한 애매한 표현이 담겨진 기본조약과 1조 경제협력 자금과 2조 청구권 해결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고 있는 청구권협정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2장에서 저자는 이러한 한일회담의 미해결과제를 외교적으로 봉합하려는 양국의 정치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냉전기와 탈냉전기 모든 시기 동안 한일회담의 미해결과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 화해정책들을 면밀하게 기술하면서, 한일 양국이 특히 탈냉전기에 “적극적 안보, 큰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관계를 관리하려 해온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역사인식 현안이 양국 간 경제, 안보 측면에의 갈등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3장에서 김상준은 한일 역사갈등이 1990년대에 대두되게 된 원인을 냉전기 반공연대로 상징되는 이념 중심의 관계 속에서 보류되었던 정체성 문제가 탈냉전기에 전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한국에서 정체성 문제 특히 민주화 이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사회에서 문제로 인식되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으나, 주된 분석의 대상은 탈냉전기 일본에서의 정체성 인식 변화이다. 야스쿠니 신사의 유슈칸으로 상징되는 1945년 이전 일본의 경험에 대한 역사수정주의적 정체성의 기억과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으로 상징되는 피해의 기억 사이의 ‘이중적 기억’이 ‘두 개의 일본’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통찰을 보여준다. 저자의 주장은 히로시마적 기억이 상징하는 평화주의가 왜 역사수정주의를 제어할 수 없는가에 대한 밀도 높은 함의를 제공한다. 평화주의의 기점이 되는 원폭에 대한 기억은 가해에 대한 기억을 억제하고 있으며, 피해의 기억은 야스쿠니적 기억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코 야스쿠니적 기억의 반대적 정체성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저자가 제기하는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체계의 필요성은 한일 양국의 합

의된 보편적 가치체계 수립보다는 일본 국내적 차원에서 피해주의와 복고주의를 넘어서는 정체성 형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부 〈경제·안보 문제와 한일관계〉는 2019년 이후 역사 문제에서 경제와 안보 분야로 확대된 한일갈등의 양상과 원인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구민교가 집필한 4장 〈한일 무역 갈등과 해결 방안: 국제무역규범을 중심으로〉는 2019년 7월에 일본 정부가 실시한 대한민국 수출 규제조치라는 경제 보복에 대한 심층 연구이다. 저자는 한일무역관계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토대로 하여,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양국간 상호의존관계가 일본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주장한다. 저자의 2019년 일본의 대한민국 경제보복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글로벌 무역거버넌스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자유주의적 수입제한 조치가 일본의 대한민국 경제보복에 대해 가지는 의미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적 자유주의 질서의 수호자처럼 자처했던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반자유주의적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사실 일본 정부는 2019년 대한민국 경제보복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꽤나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CPTPP 합의를 주도하며 자유주의 질서의 수호자로 스스로를 위상지었던 아베 정권에게 자유주의 질서 수호와 이율배반적인 대한민국 경제 보복을 국제사회에서 비가시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핵심 소재 국산화 정책에 대해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비판론은 매우 적실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글로벌가치사슬이 미중디커플링의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경쟁 속에서 경제의 안보화는 장기지속될 수 있고, 그 속에서 국산화 정책의 기회비용은 피치 못할 여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듯 세계적 경제의 안보화 속에서 한국의 국산화 정책의 핵심

타겟이 탈일본일 필요는 없다.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일 사이에 상호 협력의 구도를 창출한다면, 경제의 안보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국산화의 기회비용을 전체적 국익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박철희가 집필한 5장 〈한일갈등의 복합적 불안정화와 한일안보협력〉은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실시,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거부 결정으로 이어지는 사태에서 발견되는 역사-경제-안보로 분야를 넘어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분석은 한일관계 전반을 거시적으로 통찰하고 있으나, 이 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일 양국 간에 안보적 측면에서 실제 얼마나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후방지원을 하는 구조는 1951년 미일안보조약, 1960년 신미일안보조약, 1969년 닉슨-사토 공동성명, 1997년 미일방위가이드라인의 개정에서 발견되는 뿌리 깊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2기 아베 정권기에 이루어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 각의 결정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에 대한 저자의 반론은 설득력이 높다.<sup>3)</sup> 즉, 한미일안보협력의 큰 틀 속에서 한일안보협력을 바라봐야 한다는 저자의 강조는 큰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저자가 그리는 한미일안보협력에 대한 그림은 2장에서 남기정이 주장하는 ‘다자적 안보공동체 구축을 통한 평화의 확대’와 꽤 상이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2장과 5장의 한일안보관계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한일관계에 대한 다른 입

3) 이 내용은 저자가 책임편집으로 2016년에 출판된 연구서에 보다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다. 박철희 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장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국가비전에 대한 상이한 입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부 〈한일 화해를 위한 제언〉은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와 천자현이 집필한 6장 〈독일과 일본의 화해 정책 비교: 배상법과 전후 보상소송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학과와 이용재가 집필한 7장 〈프랑스-독일의 화해와 공동 역사교과서의 탄생〉, 국민대학교 일본학과와 이원덕이 집필한 8장 〈한일갈등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6장과 7장은 유럽 사례를 통해서 역사 현안에 대해서 일본이 보여주는 대응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6장에서 저자는 일본 사법부가 전후 보상 소송에 대해 취했던 입장을 독일의 특별법 제정과 재단 설립을 통한 전후 보상 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저자의 양국 비교는 일본의 전후 보상의 근시안적인 성격을 드러내는데 매우 적실성이 높다. 더불어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국가 간의 합의로 인해 행사될 수 없다는 일본 사법부의 논리가 가지는 근본적 한계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글이다. 7장은 독일-프랑스가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양국간의 역사화해를 도모했던 것에 대해서 심도 높은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7장은 2001년 시작된 한일 역사공동연구가 결국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과 대비되어 이해될 수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공동 역사교육을 통한 역사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1-2010년의 10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결국 상호 간에 각자의 역사연구 성과(논문)를 병행 게재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았다.

8장에는 현재 한일관계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에 대한 현실적 정책 제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한일갈등이 역사 현안에서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사회적 차원에서 상호 불신과 혐오가 강화되고, 그 외중에 양국의 인적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일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역사 문제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지점은 국내적 합의이다. 저자가 제시한 가칭 제2의 ‘민관공동위원회’ 창설은 2005년 한일회담외교문서 공개 시에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설립해서 가동했던 ‘민관공동위원회’가 다시 필요한 때라는 시사점을 준다. 대일 외교 현안으로서 역사 문제가 우리 사법부의 판결 속에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행정부의 외교적 입장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리 행정부의 입장은 선명하지 않았다. 저자의 문제제기는 우리의 외교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2005년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 후 시작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소원 이래로 한일 역사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의 관여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행정부의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기본적 입장보다 구체화된 일본에 대한 외교 요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이 한국의 국내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의 주장은 국내 사법과 국내 정치와 차별화된 외교라는 공간이 가지는 성격을 포함해서 한국의 대일역사정책에 대한 국가적 합의 도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는 결론의 장이 따로 없지만 편집자 김범수가 집필한 1장 서론에서 결론적 논의를 담아내고 있다. 화해의 다양한 스펙트럼(폭력의 종식 - 비폭력적 갈등 - 역동적 균형 - 우정의 관계 - 완전한 공동체)에서 저자는 한일관계를 갈등과 협력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저자의 취지는 『한반도 평화학』과 일치한다. 즉, 한국이 처한 특수한 현실에 대해서 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저자는 비폭력적 갈등, 역동적 균형, 우정의 관계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한일관계를 보다 우호관계가 강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 예방 전략의 하나인 ‘언급 자

제'라고 주장한다. '언급 자체'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시민의 덕목 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덕목이 국가 간 화해협력에도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다는 저자의 주장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는 한일관계를 재고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정환(Lee, Jung-Hwan)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C Berkele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후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근무 중이다. 최근 주요 연구로는 「아베 정권 역사정책의 변용: 아베담화와 국제주의」(2019), 『주권과 비교지역질서』(2020) 등이 있다.